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

: 변형적 발전주의*

박창건 _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변형적 발전주의
- III. 일본 경제정책의 변화와 현황
- IV. 일본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
- V.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의 특징과 동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향한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한 일본의 경제전략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가지 화살로 통합하고 여기에 사회보장 대책을 추가하는 경제전략을 일본 정부가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경제정책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끈 '경제발전'에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한 '변형적 발전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변형적 발전주의는 전략적 거시경제정

* 본 연구는 2019년 12월 13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전략: 변형적 발전주의?」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책의 추진, 관저 주도의 제도화된 리더십 강화, 정부-시장-사회 간 정책 네트워크의 중시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자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진국'이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2030년의 일본 경제사회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제어

경제정책, 변형적 발전주의, 아베노믹스, 일본, 2030년

.....

I .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일본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변형적 발전주의'의 제도적 기원과 진화 경로의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예측 가능한 일본 경제의 혁신에 맞추고 있다. 제2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변형적 발전주의(transformative developmentalism)'란 글로벌 위기 이후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경제정책의 융합적, 잔여적, 경로의존적 혼재성을 극복하고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국가발전 모델을 한층 정교하게 제도화시킨 전략적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주의지속론자와 신발전국가론자들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져온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화가 낳은 대내외적 취약성의 결과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영향을 주목하며, 일본의 발전주의 모델의 변화와 혼재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¹⁾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발전주의의 유일한 대안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었다.²⁾ 이는 초대형 금융기관의 몰락, 글로벌 대기업의 파산, 초국가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표출 등의 사례에서 그 조짐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WTO의 무역 질서가 담보 상태에 빠지면서 범세계적으로 FTA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와 같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문제가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쏘아 올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끈 ‘경제발전’에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한 ‘변형적 발전주의’ 모델이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더십 쇠퇴를 견제하면서 지경학적 접근으로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통상정

1) 일본의 발전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는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을 참조.

2) 신자유주의는 그 기원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장되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경제적 정당성, 그리고 마가렛 대처(Margaret H.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의 정치적 실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지향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Friedrich Hayek,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3) 박창건,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 일본형 FTA」, 『한국국제정치논총』 제52집 4호, 2012, p.42.

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경도되어 기존의 자유무역질서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수출시장 확보, 기업이윤 증대, 무역 재균형, 자유경쟁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력을 투사하는 전통적 통상외교를 넘어서 안보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방주의적 통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은 최악의 관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에도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경제발전과 사회성장의 리스크 요인을 줄여가는 변형적 발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7년 1월 경제재정간담회의에서 발표한 「2030년의 전망과 개혁: 태스크포스 보고서(2030年の展望と改革: タスクフォース報告書)」에 의하면, 2030년까지 예상되는 내외환경의 변화에 관해 세계 경제와 연계된 일본 경제를 변화의 중심에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혁신을 거듭하여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적 인식하에서 일본은 경기 침체, 재정 악화, 급속한 저출산·고령 사회화 등 직면한 커다란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과 시장원리에 의존했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과제 해결형 국가'를 목표로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일본식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장기성장을 위해서 산업 구조 개혁,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변형적 발전주의의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글로벌 위

4) 日本経済財政懇談会議, 「2030年の展望と改革: タスクフォース報告書」, 2017 참조.

기 이후 일본의 경제시스템을 설명하는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따른 변화로 대변되는 '변형적 발전주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각과 경제 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을 통해 일본 경제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포스트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정책 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변형적 발전주의가 일본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흡수되고 내부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일본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을 총정리하고자 한다.

II . 변형적 발전주의

1990년대 이래 계속되고 있는 장기불황과 인구 감소와 맞물려 일본이 추진해온 구조개혁은 정부 주도의 경제를 보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⁵⁾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추진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 경제가 시장지향적으로 변했는지, 또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 의미에서 일본 경제는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고용시스템, 장기적 거래관계·주식의 상호보유·독자적인 기업 지배구조로 인식되는 기업시스템, 메인뱅크·간접금융·호송선 단행정을 중시하는 금융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다.⁶⁾ 이러한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본질에 대

5) 小峰隆夫, 『日本經濟の構造變動: 日本型システムはどこに行くのか』, 東京: 岩波書店, 2006.

한 기능부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이다. 그 결과 일본은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업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와 기업 모두 국제경쟁에 직접 맞서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험하게 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위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과 상황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시장개방과 자유화의 방향을 채택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낳은 대외적 취약성의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장 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본 축적의 조건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와 상류층의 부 권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신자유주의 정책레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캐치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발전주의적 개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글로벌 위기에 따른 일본 경제가 수출급감, 생산성 감소, 경상이익 감소, 신용경색 심화, 고용악화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2008년 10월 생활대책, 2008년 12월 생활방어 긴급 대책, 2009년 4월 경제위기 대책 등과 같은 경제 대응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기치 아래 전개해 온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그 경제정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본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앵글로-아메리칸 방식의 자본주의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것일까? 이 물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은 앵글로-아메리칸 방식의 자본주의로의 수렴을 주장

6) 정진성,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일본비평』, 제14집, 2016, p.261.

하거나 일본적 특질의 유지를 전망하는 관점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과 대상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동, 국가정책, 기업과 노조의 관계, 사회적 가치관 등을 고려하면 일본적 특수성은 일본사회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⁷⁾ 동시에 일본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대외개방,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주도성 강화, 규제 완화와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과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경로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경제정책의 실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⁸⁾ 예를 들면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라는 더욱 강력해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다시 한번 일본 경제의 비상을 추진했지만, 경기 부양에서 늘어난 국가 채무는 차후 일본 경제부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했다. 그 결과 아베 정권은 기존의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가지 화살로 통합하고 여기에 사회보장 대책을 추가하는 경제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⁹⁾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일본 경제정책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화로’ 표출되어 신자유주의적 정책 자체가 발전주의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변형적 발전주의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상의 측면들은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변형적 발전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정책의 혼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변형적 발전주의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훅(Hook)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 경제정책의 유형(patterns), 동기(motivations), 도구화(Instrumentalisation)

7) 염미경, 『일본모델의 성공, 위기, 전환』, 한국비교사학회 편,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서울: 아르케, 2013.

8) 전영수, 「일본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과 그 특징: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일본연구논총』 제32호, 2010; 舩山誠一, 「日本型資本主義改善についての一考察」, 『貿易風-中央大学国際関係学部論文集』 第13号, 2018.

9) The Government of Japan, “Abenomics,” <https://www.japan.go.jp/abenomics/> (검색일: 2019/09/20).

를 분석하여 기존의 일본형 발전주의를 한층 더 개선한 수정되고 변형된 형태의 발전주의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⁰⁾ 더욱이 덴트(Dent)는 동아시아에서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협력하는 새로운 발전주의(new developmentalism)를 대안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¹¹⁾ 이처럼 변형적 발전주의는 새로운 발전주의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 정책 향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변형적 발전주의’는 국가를 합리적인 단일체로 간주하고 정부 주도하에서 필요할 경우 발전주의적 개입정책, 제도주의적 규제정책, 시민주의적인 복지정책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성장을 지향하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수정된 일본형 발전모델을 의미한다.¹²⁾ 이처럼 변형적 발전주의는 ‘발전국가모델’의 장점들을 수용하고 채택해서 한층 더 개선된 관점에서 국가의 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변혁적 이념 여부, 상대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정치 리더십의 제도 존재 여부,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 내 경제집단과 제도적 연계 존재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¹³⁾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겠지만 일본이 지향하는 변형적 발전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적 거시경제정책의 추진이다.¹⁴⁾ 로버트 웨이드(Robert

10) Glenn D. Hook, Julie Gilson, Christopher W. Hughes and Hugo Dobson, “Japan and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Patterns, Motivations and Instrumentalisation of Japanese Regional Economic Diplomacy,”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 (2002).

11) Christopher M. Dent, “East Asia’s new developmentalism: state capacity, climate change and low-carbon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39-6 (2018).

12) David Chiavacci and Sébastien Lechevalier (ed.), *Japanese Political Economy Revisited: Abenomics and Institutional Chan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9).

13) Linda Weiss and John M. Hobson, “State power and economic strength revisited: What’s so special about the Asian Crisis,” in (ed.) Richard Robinson, *Politics and Markets in the wake of the Asian Crisis*, (London: Routledge, 2000).

Wade)는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은 특정 전략산업 투자의 결과와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에의 노출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¹⁵⁾ 이러한 전략적 산업정책은 다양한 인센티브, 규제수단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산업전환이 가능했다. 일본의 전략적 거시경제정책은 첫째,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전략을 계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이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 둘째, 정치, 관료, 재계와의 관계적 측면을 중시; 셋째, 발전적 정향을 강조하는 등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다.¹⁶⁾ 글로벌 위기 이후 대표적인 일본의 전략적 거시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이다.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아베노믹스는 2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성장전략과 사회 시스템 개혁을 결합하면서 정책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전략적 거시경제정책은 재정 건전성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¹⁷⁾ 지속적인 경제 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관저주도의 제도화된 리더십 강화이다. 1990년대 자민당 독주체제가 무너지고 다양한 연립 정권이 난립하던 시절, 일본 정치계의 목표는 ‘정치개혁’이었다. 그 중심에는 총리 관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관저 정치’를 제대로 발휘한 고이즈미 정권의 성공 모델과 자신의 실패경험을 반추한 2차 아베 정권이 선택한 것은 경제성과를 기반으로 관저 주도의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길이었다.¹⁸⁾ 2014년 신설된

14) 熊倉正修, 『日本のマクロ経済政策: 未熟な民主政治の帰結』, 東京: 岩波新書, 2019.

15) Robert Wade,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6) Richard Stubbs, “What are happened to the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The unfolding debate.” *Pacific Review*, 22-1 (2009).

17) Kensuke Miyazawa and Junji Yamada, “The growth strategy of Abenomics and fiscal consolidation.” *Japa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7 (2015).

18) 御厨貴, 『安倍政権は本当に強いのか』, 東京: PHP研究所, 2015.

내각인사국은 총리 관저가 관료조직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내각인사국은 각 부처의 고위간부 600여 명의 임명을 관할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¹⁹⁾ 여기에 2019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제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²⁰⁾ 이 부서는 현재 구미·동북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른바 '총리 관저가 주도하는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제반은 통상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일본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기안하거나 관련 성·청(省·廳)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지형도가 관료 우위에서 관저 주도로 제도화된 리더십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정부-시장-사회 간 정책 네트워크의 중시이다. 일본은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정책, 전략, 프로젝트 국가-시장-사회 간을 중개하는 제도적 배치로써의 '정책 네트워크'를 모색해 오고 있다. 정책 네트워크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것으로, 특정한 정책 목표의 해결을 위하여 분산된 자원을 동원하는 비교적 안정된 그물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¹⁾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은 자원을 교환하고, 그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그물망의 형태로 형성되고 상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오키모토(Okimoto)는 일

19) Markus Winter, "Abe and the bureaucracy: tightening the reins." *The Diplomat*, 16 (2016).

20) 『読売新聞』, 2019年 9月 18日; 『毎日新聞』, 2019年 9月 18日 참조.

21) Bernd Marin and Renate Mayntz (eds), *Policy Network: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rankfurt (Campus Verlag: Frankfurt, 1991), p. 36.

22) Peter J. Katzenstein, *Between Power and Plenty: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p. 308.

본 경제의 성장을 국가와 산업 간의 공적-사적 이익의 수렴, 그리고 두 부문을 엮는 폭넓은 네트워크라 설명했고, 이런 점에서 일본을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라고 명명했다.²³⁾ 이러한 일본의 정책 네트워크는 개혁 지향적인 정치인과 관료를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는 특징을 보인다.²⁴⁾ 예를 들면 아베 정부는 기존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이외에 산업구조심의회,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고려사회대책회의, 남녀공동참가회의 등과 같은 경제사회 정책 관련 심의회와 간담회의 운영을 통해 정부-시장-사회 간 정책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협의된 정책결정과정을 도입하고 있다.²⁵⁾

Ⅲ .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와 현황

일본은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따라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민주당의 제3의 길로써 사회투자국가론,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과 사회정책을 결합한 아베노믹스로 경제정책이 변화해 왔다. 2013년 6월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 주도의 대담한 금융정책, 기중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이 노동문제, 사회보장대책 등 소득재분배 문제를 다룬 점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을 배려한 복지정

23) Daniel Okamoto,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24) Josse Jackson Jakobsen, “Three arrows cannot be broken: a study of Abenomics’ third stage of structural reforms.” (2014).

25) 内閣府, <http://www.cao.go.jp/council.html> (검색일: 2019/09/21).

책을 추가한 것은 신자유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발전주의 성격을 띤 사회 투자국가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일본이 제시한 아베 정권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 및 사회정책들은 발전주의로부터 한층 보완·수정된 일본형 ‘변형적 발전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변화

고이즈미 정권 5여 년간(2001.4~2006.9)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의 개혁,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2002년 10월 ‘금융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2003년 4월 ‘산업재생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사령탑으로 신설하여 ‘관에서 민으로’의 개혁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²⁶⁾ 흥미롭게도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은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를 회생시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안정성을 훼손시켰다.²⁷⁾ 여기에 고이즈미 개혁의 신자유주의 정책도입과 탈디플레이션의

26) 정미애, 「일본 민주당의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한국정치학 회보』 제47권 2호, 2013, p.189.

27) 김용열,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고이즈미 정권의 친기업정책」, 『일본연구논총』 제28집, 2008; 김용복,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경제의 위기와 변화: 성과, 원

노력은 글로벌 위기라는 대외경제적 요인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대내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만성적인 저성장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정권은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기업이윤의 급등과 채무상환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정에서 두껍던 중산층이 해체되고 계급 격차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정권에서 논의된 격차사회론은 수직적 통제가 아닌 심리적 반응으로, 고용격차, 지역격차, 교육격차, 복지격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결집된 표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²⁸⁾ 이처럼 단기간에 쏟아진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이 초래한 부작용의 핵심은 성장·분배, 시장·정부, 개인·사회 등의 양극단 사이에서 탐욕 추구를 제어하는 공감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아라이 가즈히로(荒井一博)는 신자유주의가 격차심화, 도덕붕괴, 사회분열, 복지사각 등과 같은 모습으로 ‘일본을 열화(劣化)시켰다’고 지적했다.²⁹⁾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경제의 신자유주의 채택과 맹신에는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를 컨트롤할 대안 모델의 마련은 절실히 요구되었다.

2009년 9월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노선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보편적 어린이 수당, 고교 교육 무상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제도 확대, 생활제도보험 강화,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다. 민주당 정권은 정권교체를 통해 선별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을 추구한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51권 3호, 2011, pp.222~223.

28) 이정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일본비평』 제10집, 2014, p.107.

29) 荒井一博, 『自由だけではなぜいけないのか: 経済学を考え直す』, 東京: 講談社, 2009, pp.10~13.

표출되었다. 기든슨(Giddens)은 사회투자국가론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제3의 길'로, 소득보장보다는 인적 자본 및 기회의 재분배에 투자함으로써 복지가 갖는 생산주의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³⁰⁾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당 정권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³¹⁾

민주당의 제3의 길은 '강한 경제'와 함께 '강한 사회보장'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정당화하였고, 인상된 세수는 기초연금, 노인의료, 노인간병 등의 분야 외에도 아동·보육에 전용하도록 했다는 점은 사회투자국가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복지, 재정건전성,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웠지만, 관료와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인하여 국가사업 예산 조정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지난 총선에서 월 2만 6000엔(円)의 아동수당 지급, 공립고등학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대책 없는 선심 공약을 쏟아낸 민주당의 무상공약 부메랑은 정권을 잃고 소수당으로 추락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경제가 침체의 국면에 빠져들면서, 민주당은 당내 갈등과 분점 국회(divided diet)의 리더십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몰락하게 되었다.³²⁾

민주당의 노다 총리 사퇴 이후, 이를 이어받은 자민당의 아베 총리

30)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1998).

31) 권순미,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한국사회정책』 제25권 1호, 2018.

32)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 정책전환과 분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p.150.

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위축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기간 양적·질적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성장전략과 사회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장 일변도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사회문제를 과감하게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창한 ‘제3의 길’의 긍정적인 부분을 도입한 측면이 있다.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져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일본 경제의 성장 신화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대중정치적 심리효과를 불러일으켜,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³³⁾ 그 결과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유도하여 일본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켰고, 주가 또한 상승하여 일정의 성과를 보였다. 동시에 아베노믹스는 엔저에 따른 생필품 가격의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용자 이자 부담 등의 증가로 국민 생활의 실질적 부담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 2탄으로 강한 경제, 자녀 양육지원, 사회보장 등 ‘세 가지 새로운 화살’로 구성된 정책을 발표했다. 주목할 것은 아베 정권이 거대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의 지연과 중국 경제 침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건전성을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³⁴⁾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가 이미 세계 최악이고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해 과세 기반이 너무 얇고 좁기 때문이었다. 노동개혁과 같은 세부 분야에서도 아베노믹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늘어난 상당수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여

33) 최희식,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 정책과 ‘잠복된 갈등’」, 『의정연구』 제19권 3호, 2013, p.179~180.

34) Kensuke Miyazawa and Junji Yamada, “The growth strategy of Abenomics and fiscal consolidatio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37 (2015).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단기 경제 부양 정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본 경제성장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³⁵⁾

2. 현황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과감한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대담한 규제개혁 철폐로 민간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시작이다. 아베노믹스는 확장적 통화정책, 탄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으로 구축된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두 번째 화살은 정부 채무를 감소시키며, 세 번째 화살은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³⁶⁾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은 엔저를 유도하고 내수를 자극하여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각하려는 단기적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약 10조 엔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동일본대지진 복구, 대규모 재해 발생을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정비를 위해 향후 10년간 200조 엔을 투입한다는 ‘국토강인화정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화살인 신 성장전략은 ‘국가전략특구’, ‘원전 재가동’,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일본 경제의 장기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했다.³⁷⁾

35) Sébastien Lechevalier and Brieuc Monfort, “Abenomics: has it worked? Will it ultimately fail?,” *Japan Forum*, 29-4 (2017).

36) 이승주,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 정치적 차별성과 정치적 기원」, 『사회과학연구』 제25권 4호 2018,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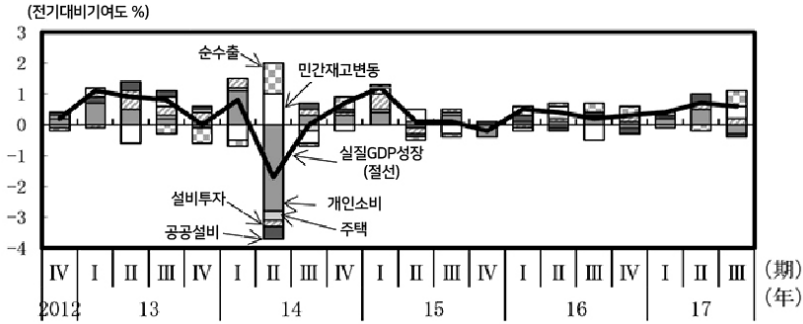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유도하여 일본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켰고, 주가 또한 상승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 닛케이지수는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시작하자 6개월 만에 80% 상승했고, 엔저 현상은 수출과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면 닛케이 평균지수가 2012년 말 기준으로 8,000엔 선에서 시작하여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에는 20,000엔선을 회복하였고, 엔저로 소니, 토요타 등 대기업의 경상이익이 2012~2015년간 41% 증가해 과거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³⁸⁾ 이는 대기업이 수출 비중이 높고 대외채권과 해외법인이 많아 엔저에 따른 영업이익과 환차익을 얻기가 수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0년 올림픽 유치 성공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경제성장이 기업수익 확대로 연결되고 고용증대 및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민간 소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데다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를 보이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림 1>은 2012년 이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임금인상을 결정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고, 오히려 엔저로 인해 원자재의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석유 가격에 민감한 내수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엔저에 따른 생필품 가격의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용자 이자 부담 등의 증가로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37) James McBride and Beina Xu, "Abenomics and the Japanese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8, March 23],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backgrounder/abenomics-and-japanese-economy> (검색일: 2019/09/29).

38) 김양희, 「아베노믹스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7년 12월 22일 KIEP 발제문, 2017, p.8.

〈그림 1〉 2012년 이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출처: 内閣府, https://www5.cao.go.jp/keizai3/2017/0118nk/n17_1_1.html(검색일: 2019/10/15).

예를 들면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초기 1년 동안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자 상황이 역전되었다. 소비자 물가지표 중의 하나인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플러스로 진입해 2014년 4월에는 1.3%대로 상승하였고 디플레이션 탈출의 기대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2014년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자 소비세 인상효과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다시 1%대로 하락했다. 더욱이 엔화 가치 약세가 수출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여 2011년 2.5조 엔을 기록한 일본의 무역적자는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어 2012년에는 6.9조 엔, 2013년에는 11.5조 엔, 2014년에도 9월까지 10.5조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³⁹⁾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10월에 아베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제시했고, 2016년 6월에 '일본 1억 총활약 플랜(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이 각의 결정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6월 아베 정권은 2050년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2단계 아베노믹스의 수립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39) 김규판, 「일본 경제 전망: 출구가 없는 아베노믹스」, 『한국관광정책』 12권, 2014, p.80.

을 목표로 궁극의 성장전략을 각의 결정으로 공식화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 사회의 연령,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를 포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개개인의 능력 발휘와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와 투자도 늘릴 수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의 구축을 위해 1억 총활약사회의 실현 방안으로 국내총생산 600조 엔을 목표로 하는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출산율 1.8명을 목표로 하는 ‘꿈을 실현하는 육아지원’, 가족 간호를 위한 이직 제도를 목표로 하는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 개의 화살’ 성장전략을 내놓았다.⁴⁰⁾

재정 건전성은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2018년 말 기준 일본은 1100조 엔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지난해 238%로 높아졌고, 이에 비해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한국은 39%에 그쳤다.⁴¹⁾ 아베 정권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계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예컨대 아베 정권은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 8%에서 10%로의 인상을 두 번이나 연기했다. 2005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는 결정을 2014년 11월에 단행했고, 2016년 6월에는 2017년 4월의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했다.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닌 일본 정부에게 재정 건전성 확보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소비세 인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한 세계개혁은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40) 一億総活躍国民会議, 「一億総活躍社会に向けて緊急に実施すべく対策: 成公と分配好循環の形成に向けて」, 2015; ‘1억 총활약사회’에 대해서는 『毎日新聞』, 2016년 11월 25일; 『日本経済新聞』, 2016년 11월 27일; 『朝日新聞』, 2016년 11월 28일 참조.

41) 『아시아경제』, 2019년 9월 13일 참조.

2020년까지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일본이 연간 약 3.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계획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와 사회보장 대책 등 소득 재분배 문제를 다룬 점과 고령자와 청장년층들을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추가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희석하는 면도 존재한다. 아베노믹스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은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백화점으로 보여, 그 전체상과 추진성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양한 경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성장촉진 효과가 미약한 것은 청년을 중심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소비를 주저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 미진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본 내수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부채나 수출로 만회하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에 직면하자, 아베 정권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총수요 진작으로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노믹스는 기능적 소득분배가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착목한 수요체계에서 친노동적 분배정책과 친기업적 자본정책이 혼재된 변형적 발전주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⁴³⁾

IV. 일본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

장기불황의 극복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42) 한국금융연구원, 「아베노믹스 2탄-새로운 세 개의 화살-발표 및 평가」,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44호, 2015, p.21.

43) Marc Lavoie and Engelbert Stockhammer,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tic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4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Branch-Geneva: ILO, 2012).

논쟁적이다. 2019년 1월에 ‘이자나미 경기(いざなみ景気)⁴⁴⁾’를 제치고 전후 최장호황기로 기록되고 있는 경기동향지수는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장기침체를 벗어난 듯이 보였으나, 소비가 부진하여 다른 경기지표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저조하다. 일본은행이 목표 물가상승률의 달성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방향기를 양적완화 중심으로 한 수요 진작(demand-side)에서 노동개혁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supply-side) 쪽으로 틀었지만,⁴⁵⁾ 수요 부진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을 실시해서 디플레이션 탈출의 돌파구를 만들고, 이어서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을 가속화시킨 후, 마지막으로 성장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안정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추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일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030년의 일본 경제정책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징

아베노믹스는 수치상으로는 호황이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저온호황’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목표인 물가상승률 2%,

44) 2002~2008년, 경기동향지수 기준으로 73개월간 지속된 일본의 호황기를 일컫는 용어.

45) 이창민, 「저온호황의 출현과 아베노믹스의 방향전환」, 『일본연구』 제75권, 2018.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 달성에는 실패했다.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공급의 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보였고 동시에 구조개혁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잠재성장률 역시 증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여기에 도쿄의 반도체 재료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이후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내 일본기업이 매출 감소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일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라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저 기조, 주가 상승, 고용지표의 개선 등으로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들었던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에 의해 성장동력을 불어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어떠한 경제정책의 혼종적 실험과 도전에 대한 ‘맥락적 착근성(contextual embeddedness)’을 내포하고 있기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은 변형적 발전주의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전략적 경제정책의 특징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리플레이션파의 정책이념 실현이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소비와 고용을 촉진하는 리플레이션파의 정책이념을 수용한 일본 경제정책을 설계했다. 아베는 2007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자민당의 대표적인 리플레이션 정책 수용자인 아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의원과 함께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리플레이션파의 경제 논리를 학습했다. 이후 총리에 재집권하면서 아베는 예일대 명예교수인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와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인 혼다 에츠로(本田悦朗)를 내각관방의 자문역으로 참여시켰고, 이와타 기쿠오

46) Takashi Matsuki · Kimiko Sugimoto · Katsuhiko Satoma, “Effects of the Bank of Japan’s curre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Economic Letter*, 133 (2015).

(岩田規久) 가쿠슈인대학 교수를 일본은행 부총재로 임명하여 리플레이션 정책이념을 아베노믹스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리플레이션파는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근본 원인이 디플레이션과 고평가된 엔화 등 통화 문제에 있다고 파악하고 금융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⁴⁷⁾ 여기에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세계 경제의 흐름도 아베 정권이 리플레이션파의 정책이념을 수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즉 리플레이션 정책의 핵심은 통화팽창이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매개로 소비를 증대시켜 불황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⁸⁾

둘째, 강한 관저의 정치기능 강화이다. 아베 정권은 총리 관저 및 내각 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거시경제 정책적 연속성을 중시하는 관료 중심의 정책결정에서 탈피하여 관저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확립했다.⁴⁹⁾ 강한 관저의 정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개진했다. 첫 번째는 내각인사국을 설치하여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여 거시경제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흥미롭게도 아베 총리는 개별 부처에서 단수로 추천한 인사 임명 여부만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개별 부처에 복수의 인사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을 장악했다. 두 번째는 정부 기관 주요 직책에 정치적 임명을 늘리고 국회 감사를 통한 정책 개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은 내각관방 대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후생노동성 대신 시오자키 야

47) Koichi Hamada, "The secret success of Abenomics," Project Syndicate, October 26,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ecret-success-of-abenomics-by-koichi-hamada-2016-10?barrier=accesspaylog>, (검색일: 2019/10/20).

48) 岩田規久男, 『リフレは正しい: アベノミクスで復活する日本経済』, 東京: PHP研究所, 2013.

49) 御厨貴 (2015).

스히사(塩崎恭久), 재무 대신 아소타로(麻生太郎) 등과 같은 장기 재임하는 장관들이 배출되면서 관료 장악력을 높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정책 결정의 중심을 관저로 이동시키면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정치적 합의를 시도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이익집단과 협의를 위한 협의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타협을 추구했다. 예컨대 아베 정권은 농업 부문에서 TPP 등 무역자유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본농업협동조합중앙회(JA全中)의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사 권한을 없애는 동시에 농지뱅크를 창설하여 효율적인 TPP 협상 타결을 위해 관저 주도의 리더십을 발휘했다.⁵⁰⁾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실행을 위해 관저 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정부 주도의 노동관행 개혁이다. 아베 정권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새로운 일본형 모델로 제시하고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혁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장기고용, 연공서열, 임금제도와 같은 일본형 노동관행에 있다.⁵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8월 아베 정권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를 ‘일하는방식개혁’ 담당 대신으로 임명하고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의장인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 장시간노동 시정, 유연한 노동방식 도입이 수월한 환경 정비, 여성·청년 인재육성이 수월한 환경정비, 질병 치료와 일의 양립, 육아 간병과 일의 양립·

50) Hironori Sasada, “The ‘third arrow’ or friendly fire? The LDP government's reform plan for th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41, 1-2 (2015).

51) 玄田有史 編, 『人手不足なのになぜ賃金が上がらないのか』,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장애인 취업, 고고용과 부가가치 산업에의 전직·재취업 지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환경 정비, 고령자 취업 촉진 등과 같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⁵²⁾ ‘일하는방식개혁실행회의’ 위원인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郎) 도쿄대 교수는 《中央公論》의 인증 NPO법인 플로렌스 대표이사 고마자키 히로키(駒崎弘樹)와의 대담에서, ‘일본의 고용시스템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⁵³⁾

2. 전망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잠재성장력 하락의 뒷에 걸린 현재의 일본 경제는 고용과 소득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소비와 민간투자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신흥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블랙시트(Brexit)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따른 세계 경제 수요의 감소, 성장둔화의 리스크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2016년 5월 미에현(三重縣) 이세지마(伊勢志摩)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의 위기감을 공유하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총동원한 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의장국가로서 G7 정상선언을 실천하고, 일본은행과 연대하여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베 정권은 미래를 향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1억총활약사회’ 실현의 가속화, 21세기형 인프라의 정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및 지방 창생의 지원, 구

52) 働き方改革実現会議, 「働き方改革実現計画」, 2017年 3月 28日.

53) 水町勇一郎・駒崎弘樹, 「実現会議議員に, 社会起業の旗手が訊く改革の本筋をはき違えるな」, 『中央公論』 3月号, 2018.

마모토(熊本) 지진과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안전과 부흥 및 재난대응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⁵⁴⁾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도까지 600조엔 경제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직종별 전망, 경제 시스템 부문의 전략,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 추정 등이 담겨져 있다.⁵⁵⁾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2020년을 넘어 2030년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자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진국'이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2030년의 일본 경제사회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⁵⁶⁾

일본 내각부 산하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산 인구(日本の将来推計人口)에 의하면, 2030년의 일본 인구는 1억 1,913만 명 정도이고, 2048년에는 1억 명을 붕괴하여 9,91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며, 2060에는 8,67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욱이 100년 후인 2110년 일본 인구는 4,286만 명 정도로 미래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을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미래인구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인구 피라미드가 '이중형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예측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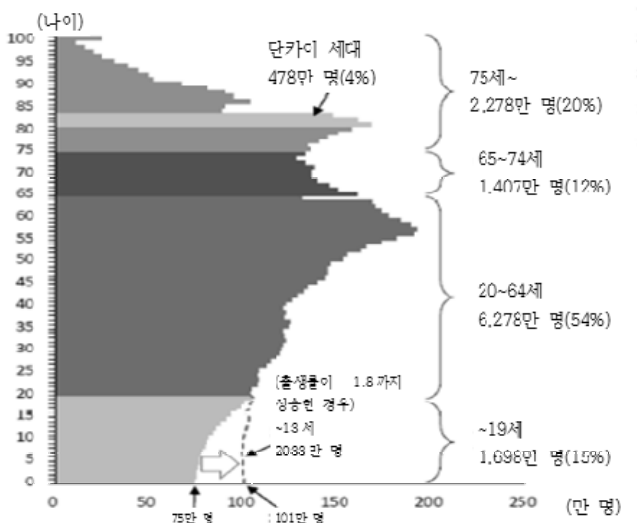
54) 閣議決定, 「“未來への投資を実現する經濟政策”について」, 2016年 8月 2日, p.3.

55) 經濟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_sangyoukouzou/pdf/008_05_01.pdf (검색일: 2019/10/20).

56) 최해옥·최병삼·김석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제30호, 2017,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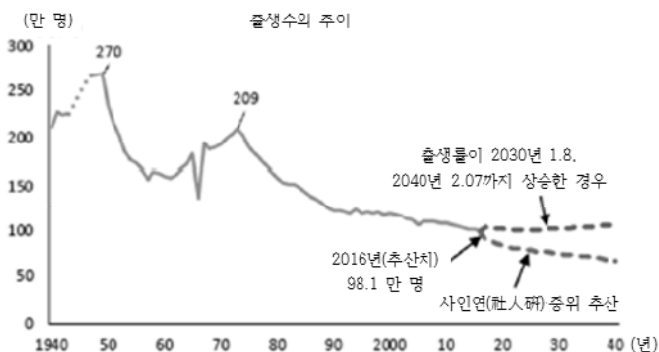
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그림 2>와 <그림 3>은 2030년의 일본 인구 예측 피라미드와 출생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2030년의 일본 인구 예측 피라미드



* 출처: 岩瀬忠篤, 「2030年の経済社会の展望: 第4次産業革命と経済発展・経済成長」, 『PERSPECTIVE』 第66号, 2017, p.5.

<그림 3> 일본 출생수의 추이



* 출처: 岩瀬忠篤, 「2030年の経済社会の展望: 第4次産業革命と経済発展・経済成長」, 『PERSPECTIVE』 第66号, 2017, p.5.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위해 아베 정권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성장동력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일본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으로 매년 발표하는 ‘일본 재흥전략’의 2016년 판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2017년 판은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 정권의 미래 성장전략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6월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미래투자계획 2017’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다섯 분야의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 분야는 보건의료, 자동차 제품, 배송 및 생산 네트워크, 경제 및 사회 인프라, 핀테크; 두 번째 분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공유와 노동 유연성 증대 등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조정하는 것; 세 번째 분야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과 행정 및 규제 개혁; 네 번째 분야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다섯 번째 분야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사람, 사물, 데이터, 자금의 지역 간의 이동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⁵⁷⁾

주목할 것은 아베 정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사회의 전망에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중요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심화’이다. 빅데이터(BDSA), 인공지능(AI), 로봇공학(RE), 사물인터넷(IoT)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취업구조의 극적인 전환, 단순·육체노동을 넘어서 지적 노동의 대체 등과 같은 경제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혁신은 일본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구조의 경쟁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57) 윤대엽, 「아베 내각의 성장정책: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 정책 거버넌스」, 『일본공간』 제22호, 2017, p.66.

들면 아베 정권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공통 기반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내각부의 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BDSA, AI, RE, IoT, 3D 프린터, 부정 광고(AD Fraud)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신규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36%를 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⁵⁸⁾ 이처럼 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도입은 수출, 노동, 고용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2030년의 일본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적 자본 대국의 실현이다. 아베 정권은 100세 시대를 맞아 희망 출산율 1.8명과 간병 이직 제로화, 그 후 출생율이 인구치환지수 2.07까지 유지하면서 2060년 인구 1억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실현이다. 아베 정권은 신산업구조 비전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고 각 산업 연결하여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고도로 융합된 세계첨단 Society 5.0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Society 5.0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급격한 변화와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경제사회 시스템하에서 장기적 산업구조·취업구조를 전망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자율적인 지역·경제권의 실현이다. 2019년 4월 자민당 정무조사회 경제성장전략본부에서 발표한 「레이와 시대·경제성장전략(令和時代・経済成長戦略)」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의 책임과 분권 하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율적인 지역경제 시스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⁹⁾ 즉 지역·경제권 내 인재 부족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중심인 도교를 거점으로 인재 매

58) 内閣府, 「“平成29年度企業に関する行動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の公表しました」, 2017.

59) 自民党政務調査会経済成長戦略本部, 「令和時代・経済成長戦略」, 2019년 5월 14일.

칭의 DB를 구축하여 인재 알선, 고용 후 지원 등 인재 유동화 지원 사업이다. 넷째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노동·소득·육아 등과 같은 분야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문화의 시정, 희망하는 출산과 육아의 실현, 다양한 질 높은 건강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실시, 젊은 세대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혜택, 다양한 가치의 생활 방식 허용 등과 같은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 경제정책의 변화, 현황, 특징에 대한 추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일본 경제정책의 전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목할 것은 제1단계의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가지 화살을 보완하여 여기에 근로방식의 개혁, 노동관행 타파, 사회보장 대책 등 제2단계의 아베노믹스를 추가하는 경제정책을 일본 정부가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경제정책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끈 '경제발전'에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한 '변형적 발전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형적 발전주의는 '발전국가모델'의 장점들을 수용하고 채택해서 한층 더 개선된 관점에서 국가의 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변혁적 이념 여부, 상대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정치 리더십 제도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 내 경제집단과 제도적 연계의 존재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변형적 발전주의는 전략적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관저 주도의 제도화된 리더십 강화, 정부-시장-사회 간 정책 네트워크의 중시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은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따라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민주당의 제3의 길로써 사회투자국가론,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과 사회정책을 결합한 아베노믹스로 경제정책이 변화해 왔다.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유도하여 일본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켰고, 주가 또한 상승하여 일정의 성과를 보였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저온호황'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탈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과감한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대담한 규제개혁 철폐로 민간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정책이 기능적 소득분배가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착목한 수요체계에서 친노동적 분배정책과 친기업적 자본정책이 혼재된 변형적 발전주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가 경제정책의 혼종적 실험과 도전에 대한 '맥락적 착근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변형적 발전주의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전략적 경제정책이 리플레이션파의 정책이념 실현, 강한 관저의 정치기능 강화, 정부 주도의 노동관행 개혁 등과 같은 특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2030년의 일본 경제정책은 인적 자본 대국의 실현, 세계를 선도하는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실현, 자율적인 지역·경제권의 실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자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진국’이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2030년의 일본 경제사회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9년 10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12월 6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12월 9일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권순미,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한국사회정책』 제25권 1호, 2018.
- 김양희, 「아베노믹스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7년 12월 22일 KIEP 발제문, 2017.
- 김용복,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경제의 위기와 변화: 성과, 원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51권 3호, 2011.
- 김용열,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고이즈미 정권의 친기업정책」, 『일본연구논총』 제28집, 2008.
- 김규판, 「일본 경제 전망: 출구가 없는 아베노믹스」, 『한국관광정책』 12권, 2014.
- 박장건,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써 일본형 FTA」, 『한국국제정치논총』 제52집 4호, 2012.
- 염미경, 「일본모델의 성공, 위기, 전환」, 한국비교사학회 (편).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서울: 아르케, 2013.
- 윤대엽, 「아베 내각의 성장정책: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 정책 거버넌스」, 『일본공간』 제22호, 2017.
-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 정책전환과 분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 이정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일본비평』 제10집, 2014.
- 이창민, 「저우호황의 출현과 아베노믹스의 방향전환」, 『일본연구』 제75권, 2018.
- 이승주,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 정치적 차별성과 정치적 기원」, 『사회과학연구』 제25권 4호, 2018.
- 정미애, 「일본 민주당의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2호, 2013.
- 정진성,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일본비평』, 제14집, 2016.
- 전영수, 「일본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과 그 특징: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일본연구논총』 제32호, 2010.
- 최해옥·최병삼·김석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제30호, 2017.

최희식,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 정책과 '잠복된 갈등」, 『의정연구』 제19권 3호, 2013.

한국금융연구원, 「아베노믹스 2탄- 새로운 세 개의 화살- 발표 및 평가」,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44호, 2015.

2. 국외문헌

日本經濟財政懇談會議, 「2030年の展望と改革: タスクフォース報告書」, 2017.

岩瀬忠篤, 「2030年の経済社会の展望: 第4次産業革命と経済発展・経済成長」, 『PERSPECTIVE』 第66号, 2017.

小峰隆夫, 『日本経済の構造変動: 日本型システムはどこに行くのか』, 東京: 岩波書店, 2006.

舩山誠一, 「日本型資本主義改善についての一考察」, 『貿易風-中央大学国際関係学部論文集』 第13号, 2018.

御厨貴, 『安部政権は本当に強いのか』, 東京: PHP研究所, 2015.

荒井一博, 『自由だけではなぜいけないのか: 経済学を考え直す』, 東京: 講談社, 2009.

一億総活躍国民会議, 「一億総活躍社会に向けて緊急に実施すべく対策: 成公と分配好循環の形成に向けて」, 2015.

働き方改革実現会議, 「働き方改革実現計画」, 2017年 3月 28日.

閣議決定, 「“未来への投資を実現する経済政策”について」, 2016年 8月 2日.

岩田規久男, 『リフレは正しい: アベノミクスで復活する日本経済』, 東京: PHP研究所, 2013.

玄田有史 編, 『人手不足なのになぜ賃金が上がらないのか』,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水町勇一郎・駒崎弘樹, 「実現会議議員に, 社会起業の旗手が訊く改革の本筋をはき違えるな」, 『中央公論』, 3月号, 2018.

熊倉正修, 『日本のマクロ経済政策: 未熟な民主政治の帰結』, 東京: 岩波新書, 2019.

自民党政務調査会経済成長戦略本部, 「令和時代・経済成長戦略」, 2019年 5月 14日.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_sangyoukouzou/pdf/008_05_01.pdf, (검색일: 2019/10/20).

内閣府, <http://www.cao.go.jp/council.html> (검색일: 2019/09/21).

内閣府, 「平成29年度企業に関する行動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の公表しました, 2017.

Chiavacci, David and Sébastien Lechevalier (ed.), *Japanese Political Economy Revisited: Abenomics and Institutional Chan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9.

Dent, Christopher M, “East Asia’s new developmentalism: state capacity, climate change and low-carbon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39-6 (2018).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Giddens, Anthony,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1998.

Hamada, Koichi, “The secret success of Abenomics,” Project Syndicate, October 26,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ecret-success-of-abenomics-by-koichi-hamada-2016-10?barrier=accesspaylog> (검색일: 2019/10/20).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Hook, Glenn D., Julie Gilson, Christopher W. Hughes and Hugo Dobson, “Japan and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Patterns, Motivations and Instrumentalisation of Japanese Regional Economic Diplomacy,”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 (2002)

Jakobsen, Josse Jackson, “Three arrows cannot be broken: a study of Abenomics’ third stage of structural reforms, (2014).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Katzenstein, Peter J, *Between Power and Plenty: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Lavoie, Marc and Engelbert Stockhammer,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tic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4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Branch-Geneva: ILO, (2012).

Lechevalier, Sébastien and Briec Monfort, “Abenomics: has it worked? Will

- it ultimately fail?," *Japan Forum*, 29-4 (2017).
- Matsuki, Takashi · Kimiko Sugimoto · Katsuhiko Satoma, "Effects of the Bank of Japan's curre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Economic Letter*, 133 (2015).
- Marin, Bernd and Renate Mayntz (eds), *Policy Network: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rankfurt, Campus Verlag: Frankfurt, 1991.
- McBride, James and Beina Xu, "Abenomics and the Japanese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8, March 23],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backgrounder/abenomics-and-japanese-economy>, (검색일: 2019/09/29).
- Miyazawa, Kensuke and Junji Yamada, "The growth strategy of Abenomics and fiscal consolidatio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37 (2015).
- Miyazawa, Kensuke and Junji Yamada, "The growth strategy of Abenomics and fiscal consolidation, *Japa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7 (2015).
- Okamoto, Daniel,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Sasada, Hironori, "The 'third arrow' or friendly fire? The LDP government's reform plan for th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41, 1-2 (2015).
- Stubbs, Richard, "What are happened to the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The unfolding debate, *Pacific Review*, 22-1 (2009).
- The Government of Japan, "Abenomics, <https://www.japan.go.jp/abenomics/> (검색일: 2019/09/20).
- Wade, Robert,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Winter, Markus, "Abe and the bureaucracy: tightening the reins, *The Diplomat*, 16 (2016).
- Weiss, Linda and John M. Hobson, "State power and economic strength revisited: What's so special about the Asian Crisis, in (ed.) Recharad Robinson. *Politics and Markets in the wake of the Asian Crisis*, London: Routledge, 2000.

Abstract

Japan's Economic Policies after the Global Crisis: Transformative Developmentalism

Chang-Gun Park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economic policies after the Global crisis and predicts what form Japan's economic strategy will take for future growth engines toward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be administration is implementing a new growth strategy that Japanese-oriented economic policies with increases institutional non-compliance in the post-neoliberal era. Namely, the Japanese administration is adopting economic strategy adding the social security measures in the three arrow - bold monetary policy, flexible fiscal policy, and growth strategy - of Abenomics in the post-neoliberal era. That is to prove that Japan is adopting economic policie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led to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to a model of 'transformative developmentalism' presented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Abe administration's tendency toward transformative developmentalism can be characterized by promoting strategic macroeconomic policy, reinforcing official-led institutionalized leadership and importance of policy network among government-market-society. Above all, Japan is preparing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2030 for the growth of Japanese economy through the analysis of 'human capital' and 'human investment'. In other words, the Abe administration is creating new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challenges facing its country and using a strategy to prepare for Japan's economic society in 2030 by changing the weakness of 'task-preferred country' to the strength of 'task-solving advanced country'.

Key words

economic policies, transformative developmentalism, Abenomics, Japan, 2030